

社說

사학재정 확충위한 장단기 정책 필요

— 등록금협상에 부쳐

개학을 맞아 새학기가 시작되어 대다수 학생들 학부모의 마음은 어둡기만 하다. 이제 연례행사처럼 되어버린 등록금 인상 문제가 사립대학의 재정난과 함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끝이 쉽게 보이지 않기에 그렇다. 특히, 두지리수의 물가인상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숙, 자취, 음식, 대중교통비등 필수적인 생활여건의 요금까지 인상시켜 그 고충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각종 요금인상과 등록금인상은 가족이나 아낀 허리를 더욱 졸라매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의 빈곤한 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근래, 각 사립대학마다 그 폐해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입학제에 대한 논의는 사학재정의 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는 반면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의 발전을 위한 인건비, 건물증축·보수, 도서관·입비등 쓰여야 할 곳에 비해 대학으로 들어오는 돈은 매년 오르는 불가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는 사학재정을 등록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등록금인상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도 변함없이 학교와 학생측간에 등록금 인상을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본교의 경우에도 지난 5월 2차협상까지 가졌지만 별다른 결과없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예전에 보아왔듯이 등록금협상의 결과가 단지 인상폭에 관한 조정으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단지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이 주장하듯이 인상폭에 관한 협상은

공정안을 되풀이 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시적 눈리개에 불과한 등록금인상이 아닌, 보다 장단기적이고도 시급한 안정적 재원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사학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학생주장에서도 사학이 대학교육의 수용자임을 볼때 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보조가 가장 먼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도 늘어나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부실했던 탓에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요즘 선거에서 남비하는 돈을, 교육에 투자한다면 우리사회의 장래는 더욱 밝아지지 않을까? 한편 사학재정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도 사학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족한 재정으로 마련한 예산이 불합리하게 쓰인다는 의구심이 없도록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점차적인 재단의 공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은 나라 몇 없을 것이다.

이제 걸맞지 않게 우리의 사학재정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또한, 등록금 인상은 학교나 학생에게 모두 짐박한 문제이다. 교육의 탓이라고 책임을 툴기전에 대학의 3주체인 교수·학생·직원 이 주인으로 나서 등록금 문제를 하루빨리 슬기롭게 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경희의 질적 도약을 위한 계기

— 연구박사제 시행에 바란다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학교는 화사운영에 있어 많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중 대학교육의 성장·발전면에서 볼때 '연구 박사제도(Post Doc)'는 학문 연구에 새로운 매개체로 제도를 주목받고 있다.

전문분야의 독창적인 연구능력을 보충강화하는데 일조하게 될 이번 제도는 기존의 연구원(교수)들에게도 첨단학문의 공급을 원활히 해 줄것은 물론 이 계획이 성과를 이룬다면 인문·사회계에는 학문의 전문성확보 효과와 그에 따른 한국학계의 국제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 공화된 자연계열 부문은 첨단과학기술을 보다 원활히 습득·소화할 수 있을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는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을 학습할 수 있게 기회를 주게 된다.

학교측이 발표한 연구박사제 규정을 잠시 언급하면 박사학위취득자중에서 획기적인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자를 선발, 이에 일정한 기간(1~2년)의 연구와 강의에 종사하도록 연구여건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선발은 매년 전학과를 대상으로 하는데 약5명으로 선발위원회 구성, 선발하게 된다. 이는 것이다. 상기 제도의 정착과 비전. 그리고 그 파급이 매우 크다. 즉 대학이 학문의 전당인 만큼 신기술 창조와 더불어 신학문의 창조성의 의무도 가지는 것. 대학이 가져야 할 하나의 자세로 바로 연구하는 대학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연구부위'로 대학이 그 재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포함공대이다. 이 대학은 지난 88년부터 연구박사제를 도입, 오늘날의 성장을 이루고 있고 최근 몇몇간지에서도 연일 보도하듯이 '연구하는 대학'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질적성장은 바로 '연구'에 있다.

우리대학도 이제 이러한 제도를 채택 대학본연의 자세로 나아감은 무척이나 반기는 처사이며 또한 연구박사제를 채택함으로써 부족한 교수진 운영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제도가 그 계획 의도에 따라 시행되려면 많은 주변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생될 결과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지원 또한 있어야 한다.

현 대학교육의 현장을 점검하여 보면 우리의 현실은 비판과 자성의 모습이며 더한층 열악한 교육환경은 대학이 갖는 본연의 의미를 극히 퇴색시켜 버리고 있다.

'연구를 하려해도 기본 기자재와 책자도 제대로 없다'는 한 교수의 푸념은 대학내 실험기자재와 도서관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실감있게 보여준다. 이러한 상태에서 모처럼의 좋은 제도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선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재정지원과 연구에 필요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질 높은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열악한 분위기에서 최고의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동상이몽이다. 대학의 제품은 '학생'이다 학생을 만드는 과정은 교육의 여건인 것이다.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인 '교수'의 능력과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당국과 학교당국은 단순한 제도채택만이 아닌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은 물론 학교당국은 이번 연구 박사제도 이행에 있어 적극적인 물적지원과 함께 교수들의 학문연구에 있어 대폭적인 지원이 '연구박사제도'가 이번제도가 좋은 제도로 발전되리라 보여 이에 관계된 사람들의 많은 노력을 바란다.

지난달 19일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의 남북한 합의서 채택과 비핵화공동선언은 실로 '통일'의 필연적 전제조건제일이란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이 합의서와 관련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남한이 핵사찰을 우선시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합의서의 이행시 민족대단결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어 대조가 된다고 하겠다.

지난주 2일자 각 일간지에는 리스카시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북한의 94년 핵무기체제 완비 가능성에 대해 보도기사와 인터뷰로 다루어 졌다.

이어 5일자 신문에서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의 대응방안이 보도되었는데 북한이 5월까지 핵사찰을 거부할 때 주한미군의 추가강속을 보류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한국일보의 2일자 사실을 통해 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사찰 불응은 기존의 남북합의서, 비핵화선언, 정상회담등의 남북 관계를 신중히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합의서가 채택될 당시만 해도 통일은 멀지 않았다면서 떠돌아 다녔던 언론의 현재 보도태도는 정부의 정책에 어떤 분석이나 비판없이 일방적 지지를 보내는

복합의서, 비핵화선언, 정상회담등의 남북 관계를 신중히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합의서가 채택될 당시만 해도 통일은 멀지 않았다면서 떠돌아 다녔던 언론의 현재 보도태도는 정부의 정책에 어떤 분석이나 비판없이 일방적 지지를 보내는

국측의 태도에 대해, 북한의 미군철수 주장과 한반도의 군축조치 요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은 어떤 사안에 대해 보다 많은 일반대중들의 이해와 올바른 비판의 조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 다양한 시각과 분석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통일의 최우선 전제조건으로는 남북한 상호신뢰와 군축을 통한 상호대결상태의 극복이 우선이라 하겠다.

언론도 이번 핵사찰 보도와 관련해 미국정부의 압력이 어느정도 가해져 나왔다고 볼 수 있는 한국정부의 일방적 발표를 단순 보도하기 보다는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국민적 염원의 통일에 대해 나름대로의 역할이었을 것이다.

아직까지도 북한을 전쟁미치광이 정도로 밖에 파악하지 못하는 그릇된 반공이데올로기의 유포에 더 이상 일반대중들은 시선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언론은 분명히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소식과 함께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분석까지도 병행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임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기태 記者〉



핵관련 정부발표 일방적 동조 보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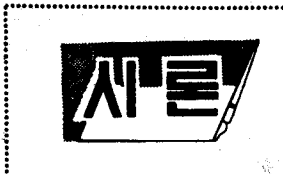
북한도 핵사찰을 부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특별히 한국과 미국의 5월 사찰을 지지하고 나선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핵문제와 관련한 미

이번 핵사찰 보도의 경우에도 남북합의서의 올바른 이행 측면에서 파악 했어야 될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핵사찰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함으로써 통일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되었다.

공정선거보도 민주주의의 첩경

—선거보도 감시 운동의 의의와 역할



시청자와 독자 측, 국민과 입장에서 조직적으로 언론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결성된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선거연·공공대표 정동익, 민연협회장 등 5명)도 수습자운동단체의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그 활동의미가 매우 크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중앙언론연구원, 한국교회협의회 언론대책위원회, 한국사회언론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 등 5개 언론관계단체 및 서영훈(전 KBS사장), 이영희(한양대교수), 이상희(서울대교수), 김중배(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준명(전 조선대 총장) 등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선거연은 언론수용자운동이 체계적으로 결집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선거연은 결성문을 통해 "권력이나 자본의 힘으로 선거보도의 진실성을 파괴하거나 언론인의 진실한 선거보도를 위협한다면 국민과 함께 단호히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특히 오는 총선거까지 언론의 편파·왜곡보도를 감시하여 공정·평등한 선거보도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언론계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

뒤에는 심포지엄이나 자료집 발간 등 후속활동도 갖는다.

위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 선거연은 집행위원회 산하에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독자·시청자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독자·시청자위원회의 밑에는 신문·방송 모니터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선거보도감시전화선을 운영하여 불공정보도에 관한 국민들의 제보를 받는다.

도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비관적 공약보도 △정치 냉소주의, 허무주의를 부추키는 보도 △사회불안정 조장 보도 △냉전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허구적 보도 △지방색 조장 보도 등이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모니터링 고서를 통해 들어 보겠다.

1) TV방송

① 21일 KBS, MBC 9시 뉴스: 지구당개편대회 보도에서 정당별 화면구성과 보도시간 배정에 심한 차별성을 보였다.

② 24일 KBS, MBC 9시 뉴스, SBS 8시 뉴스: 정부부처장이나 공약을 아무런 여과없이 무책임하게 보도했다. 예) <서울방송>의 서울시장 '지하보도 건설차도' 보도

③ 25일 MBC 9시뉴스, SBS 8시뉴스: 총선후보자 소개 보도에

의 공명선거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실보도의 원칙에서 벗어난 보도이다. 두 신문은 정부·여당의 기관지라고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중앙일보의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가 지적되었다. 대체로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고는 여당에 편향적이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못지않게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용어사용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양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주장', '시비' 등, 국민당에 대해서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사용하며 특정정당에 이익을 주고 있다.

그동안 신문·방송의 선거보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선의 의미와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기보다는 정치적 불신과 냉소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정부의 신심성 공약을 여과없이 무비판적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선거의 과열타락을 크게 취급하면서 정당정치의 부정적 측면들만 애써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선거연은 정치적 불신과 냉소주의를 조장하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언론은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공명선거를 지향하면서 투표참여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보도하는 게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TV는 유권자들의 정보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선거보도를 늘리고 선거 분석 추가보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TV화면처리의 편파성도 시정되어야 한다.

편파·왜곡보도 냉소주의, 지역감정 조장

올바른 선택유도하는 언론역할 시급

모니터보고서는 7일 현재 TV 방송(6차), 라디오방송(3차), 신문(3차) 등 12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작성한 보고서는 각 언론사와 노조 및 대학언론사 관련단체에 보내 참고토록 하고 있다.

선거연 모니터활동에 대한 언론계 및 주위의 반응도 매우 다양하다. 지난 4일자 '기자협회보'(676호)에 실린 '선거연 보고서, 언론계 반응'이라는 기사를 보면 일단 '공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성 환기'라는 측면에서 유익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며 언론사 관련기자나 간부들이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후문이다.

모니터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다. 모니터가 너무 '양적 균형'에 중점이 두어져 제작여건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부 모니터 분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니터 시각이 제작자와 독자·시청자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제작여건 등이 보도결과물에 대한 면책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게 선거연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주요 왜곡보

서 TV화면처리나 시간배정이 정당별로 큰 차이가 있다.

④ 26일 SBS 8시뉴스: 핵문제 보도 순위가 23일~24일(3쪽, 11~13번재), 25일(2쪽, 5~6번재), 26일(5쪽, 1~5번재)이 되면서 보도순위가 계속 높아져 부정적 기사를 부각해 안정화국 심리를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라디오 방송

① KBS, MBC 라디오(26일 낮 12시뉴스): 선거관련 보도편성 기준이 일정치 않다. KBS라디오의 경우 전체뉴스 21쪽지중 선거관련 기사는 한쪽지에 불과했다.

② CBS, BBC, PBC(21일 오전 8시 9시): 전체뉴스 시간중 선거관련 보도는 CBS45%, BBS 14.5%, PBC 3.7%로 PBC나 BBS가 CBS에 비해 절대시간 및 대양성에서 심한 편차를 드러냈다.

3) 신문(2월 27일~29일)

계속 선거운동의 혼탁상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강두 후보의 구속과 관련, 조순일보의 공명선거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서울신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여당



POSCO메세지 ② 입학편



君臣水魚, 水魚之交

군신수어(君臣水魚), 水魚之交(수어지교)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평생동안 삶을 함께 하는 벨레야 될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수님과 만남에 무한한 학문의 깊이가
선배님과 만남에 따뜻한 마음이
동기와의 만남에 애뜻한 우정이
그리고 그 아이와의 만남에 설레임이 —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웃픈,
교수님, 선배님, 친구, 그리고 그 아이 —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대학에서 학업도 중요하지만 사제, 선후배나
동료간의 인간관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오래도록 간직하면
원만한 대인관계, 멋진 대학생활이 될 것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대의
변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